

1994년도 한국농업기계학회 주최
『UR타결과 농업기계화』에 관한
토론회 발표문(1994. 2. 3)

UR협상의 타결과 농기계 산업의 대응방안

姜 正 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목 차

| | | |
|----|-------------------|----|
| 1 | 서론 | 71 |
| 2 | UR협상의 배경과 타결내용 | 71 |
| 3. | UR협상 타결의 파급효과 | 75 |
| 4. | UR이후 농정의 방향 | 77 |
| 5. | UR이후 농업기계산업의 대응방안 | 80 |
| 6 | 결론 | 93 |

I. 서론

○ 1986년이후 7년간 진행되어온 UR협상이 당사국들간 기본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마침내 타결되었음. UR협상은 기본적으로 농산물교역의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과 기술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그로인한 파급영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임. 따라서 우리농업은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하루속히 갖춰야 할 것임. 국제농산물시장에서의 경쟁국과 실현해야 될 생산비용수준, 품질등이 구체화되었고, 또한 목표시간 역시 구체화되었음. 이러한 구체화된 목표를 달성치 못할 경우 우리농업은 기초자체가 뒤흔들릴 수도 있음.

○ 본 연구에서는 UR협상타결이 우리농업에 미칠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UR이후 우리농업이 가야할 길과 특히 농업기계화의 방향을 먼저 살펴보고, 여기에 기초하여 농업생산구조개선의 핵심요소인 우수한 농기계의 생산을 담당해야 할 농기계산업이 장차 어떻게 진로를 잡아야할 것인가에 대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명해보고자 함.

II. UR협상의 배경과 타결내용

1. UR협상의 배경

○ UR협상배경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GATT체제를 검토해야 됨. 2차 대전이후 세계무역질서의 기본축인 GATT는, 1948년 미국을 중심으로한 23개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경제회복이라는 목적아래 결성됨. GATT에서 취급되어온 주요 의제는 공산품, 철강, 서비스 등의 비농산물 부분이었음.

○ GATT내에서 농산물분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 초반 이후, 세계적 식량문제가 대두된 이후로 볼 수 있음.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해 각종 보조지원정책, 가격지지정책, 수입장벽의 강화 등을 구사해 옴. 이로 인해 농산물 과잉재고문제와 더불어 농업보조금으로 인한 재정출혈이 현안문제로 대두됨.

○ 이러한 농산물 관련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농업선진제국에서는 농산물 교역도 GATT체제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함. 환언하면 농산물 시장질서의 회복, 각국 농산물 정책에 따른 왜곡된 무역구조방지, 직·간접 보조금 배제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산물도 다자간 무역체계아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UR협상의 논의 개요

- 1983. 5. 윌리엄스버그 경제정상회담에서 최초제기.
- 1983. 11. 미·일 수뇌회담에서 미국 주도아래 다자간 무역협상 추진합의.
- 1986. 9. 우루과이의 푼타텔 에스터에서 제8차 다자간 협상인 UR이 제기됨.
- 푼타텔 에스터 각료선언문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세계농산물 시장 질서를 GATT체제로 편성하는 것임. 농산물교역의 자유화 확대를 위해 수입장벽을 완화하고, 직·간접 보조금완화, 농산물 위생장벽 등의 완화를 주요 추진내용으로 하고 있음.

○ UR협상은 GATT체제내에 이루어지는 다자간 협상이므로 GATT의 일반원칙을 따르게 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무차별(non-discrimination)원칙 : 당사국간의 동등대우 원칙.
- 자유무역의 원칙 : 수출입제한조치 금지, 관세인하.
-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의 원칙 : 공정경쟁저해 각종 보조 및 부당가격 경쟁 등 금지.
- 개도국 우대 원칙.

(2) UR협상의 타결내용

○ 최근 우리 농업을 둘러싼 가장 큰 여건변화는 아무래도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진일 것임. 유사 이래 우리 농업에 최대의 역경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던 UR협상이 우여곡절끝에 타결되었고, 지금까지 국제무역질서의 축이던 GATT체제가 WTO체제로 전환되었음. 이러한 변화의 중심내용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농산물시장이 범세계적, 시장지향적인 무역질서로 재편되어 간다는 것이며 이는 세계농업생산체제의 일대 개편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됨.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자원과 기술의 치열한 자유경쟁시대로 치닫고 있음.

○ UR협상타결을 통해 우리가 이행해야 될 수입개방조건을 (표 1)에서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농업은 엄청난 시련앞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됨. 그렇다고 비관만으로 농업자체를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임. 이러한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우리농업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화될 지 누구도 예측키는 어려움. 단지 농업에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상황타개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농업뿐만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점만은 쉽게 상정되는 것임.

○ 나아가 허용대상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보조금 허용대상인 국내보조금: 소비자

로부터의 이전이 아닌 공공재정에 의한 보조,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는 보조에 대해서도 1986-88년 평균 감축대상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기준연도 보조금의 13.3%를 매년 균등하게 감축토록 되어 있음. UR협상에서의 국내보조정책은 (표 2)와 같이 분류되며, 국내보조관련 주요합의사항은 (표 3)과 같음.

(표 1) 주요 농작물의 수입개방내용

| 품 목 | 개 방 내 용 |
|---------------------|--|
| 쌀 | - 95~2004년까지 국내 수요량의 1~4% 최소시장접근 허용 - 95년 1% 도입, 96~99년 매년 0.25%씩, 2001~20004년 해마다 0.5%씩 수입물량 증대 |
| 쇠고기 | - 95~2000년까지 킬터물량 확대 (95년 12만 7천t, 2000년 22만 5천t) - 2001년 7월 이후 완전수입개방(단, 관세율 현재 20%에서 43.6%('95)로 인상, 2004년에는 40%) |
| 돼지고기 닭고기 | - 97년 7월이후 완전개방 - 단, 관세율 소폭인상후 인하: 돼지고기(25%→37%('95)→25%(2004년)), 닭고기(20%→35%(95)→20%(2004년)) - 킬터계: 돼지고기 '95년 21,930톤→18,275톤(1997.1-6) 닭고기 '95년 7,700톤→6,500톤(1997.1-6) |
| 유제품 | - 유장, 버터: 97년 7월 이후 개방(관세율 40%→99%('95)→49.5%(2004년)) - 치즈류: 현행 관세율 40%로 개방 - 분유, 고율관세화 추진 |
| 감귤 | - 생감귤: '97년 7월 이후 관세율 99%로 높여 개방, 2004년 40%관세 킬터: '95년15천톤→'97년 25천톤이후 매년12.5%증량 - 오렌지쥬스액 97년 7월부터 완전개방(관세율 60%) 킬타: '95년60천톤→40천톤(1997.1-6) |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 - 97년 7월 이후 현행 관세로 완전개방. 단, 수입피해 발생 때 조정관세 부과할 수 있도록 실링 관세장치(관세상한치)마련 |
| 보리, 감자, 옥수수, 구구마 | - 95년이후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화 수입개방 - 관세화, 관세화상당치 10년간 10%감축. 최소시장접근(3% →5%)또는 현행시장접근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4)

- 다만 최소허용보조(De-minimis)가 인정됨에 따라 품목특정적 AMS계산가능 품목의 보조총액이 해당품목 생산액의 10%이하이거나, 품목불특정 AMS보조 총액이 농업총생산액의 10%이내인 경우에는 Total AMS 계산에서 제외됨 (AMS=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 아래의 생산통제하의 직접지불정책은 Total AMS계산에서 제외됨.
 - + 고정된 면적과 단수에 기초한 직접지불
 - + 기준생산수준(Base level of production)의 85%이하에 대한 직접지불
 - + 고정된 마리수에 대해 보조되는 직접지불(축산물)

(표 2)

UR농업협정에 의한 국내보조정책의 분류

| | | |
|--------|-----------|---|
| 감축대상정책 | | 1. 시장가격지지 2. 감축대상 직접지불 3. 기타 감축대상보조 |
| 허용대상정책 | 정부서비스 | 1. 일반서비스: 연구, 방제/방역등 병해충예방, 교육/훈련, 지도/홍보, 검사, 유통촉진, 하부구조개선 2. 국내식량구호 3.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 |
| | 허용대상 직접지불 | 1. 생산중립적 소득지지 2. 소득보험 및 소득안정화 시책 3. 재해복구 및 구호 4. 은퇴/탈농지원 5. 휴경보상 6. 투자보호를 통한 구조조정지원 7. 환경보존관련지원 8. 낙후지역 개발지원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4)

(표 3)

국내보조관련 주요 합의내용

| 구 분 | 일 반 원 칙(선진국) | 개 도 국 우 대 |
|----------|---|---|
| 감축목표 | 20% | 13.3%(선진국의2/3이상) |
| 감축이행기간 | 6년(1995-2001) - 회계년도경우: 1995-2001 | 10년(1995-2005) - 회계년도경우: 1995-2004 |
| 기준년도 | 1986-1988 평균 | 좌동 |
| 기준감축수준 | 1986-1988 평균 감축대상보조액 | 좌동 |
| 감축약속표시방법 | Total AMS - 품목특정AMS, 품목불특정AMS, 그리고 상응한 보조(EMS)의합계 | 좌동 |
| 감축방법 | 연도별 균등감축 | 좌동 |
| 최소의무면제상한 | 5% | 10% |
| 허용보조범위 | 알표 참조 | 일반적 허용대상 이외의 일반보조투자, 마약작물 작목전환, 영세농에대한 투입재 보조허용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4)

3. UR협상 타결의 파급효과

(1) 직접적인 농업피해

○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해 외국 농산물의 국내수입량이 증가하고, 이는 바로 국내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것임. 이 가운데 비교적 가격하락폭이 큰 작목으로는 곡물, 쇠고기, 돼지고기, 감귤, 고추등이 될 것으로 보임(표 4). 그러나 품목간 국내생산조정이 어려울 경우 여타 품목에 대한 가격폭락 현상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표 4) 수입자유화에 따른 가격변화 예측 (1990년 가격)

| 구 분 | 1992 | 1995 | 2001 |
|----------------|--------|--------|--------|
| 쌀 (원/80kg) | 86,400 | 84,900 | 86,800 |
| 보리 (원/76.5kg) | 55,300 | 31,600 | 30,100 |
| 맥주맥 (원/40kg) | 21,000 | 20,400 | 19,400 |
| 옥수수 (원/40kg) | 18,000 | 14,300 | 13,600 |
| 콩 (원/kg) | 1,010 | 880 | 840 |
| 감자 (원/3.75kg) | 1,470 | 1,320 | 1,280 |
| 고구마 (원/3.75kg) | 940 | 810 | 770 |
| 쇠고기 (원/kg) | 11,200 | 9,900 | 6,600 |
| 돼지고기(원/kg) | 3,900 | 3,700 | 3,100 |
| 닭고기 (원/kg) | 1,940 | 1,850 | 1,900 |
| 감귤 (원/15kg) | 7,000 | 8,200 | 5,400 |
| 고추 (원/600g) | 3,036 | 1,930 | 1,770 |
| 마늘 (원/3kg) | 4,151 | 4,500 | 5,200 |
| 양파 (원/kg) | 96 | 170 | 200 |
| 참깨 (원/4kg) | 23,366 | 22,600 | 21,300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4)

○ 외국농산물 수입량의 증가, 국내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국내농산물의 자금율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비교적 자금율의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작물은 보리, 맥주맥, 콩, 감자, 쇠고기, 감귤 등임(표 5).

○ 주요 15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우리 생산농민이 입게 될 피해액은 (표 6)과 같음. 이러한 피해추정은 상당부분 과거의 자료에 의해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소평가될 수 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물과 쌀의 피해는 적지 않음. 더욱이 개방시행이 이행됨에 따라 개방조건이 점차 완화되기 때문에, 상당기간이 지난후 여기에 적응치 못할 경우 우리 농업의 존립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표 5) 수입자유화에 따른 자급률 하락

단위 : %

| 구 분 | 1992 | 1995 | 2001 |
|------|-------|------|------|
| 쌀 | 97.5 | 98.9 | 97.1 |
| 보리 | 83.3 | 81.1 | 72.1 |
| 맥주맥 | 65.8 | 62.3 | 41.6 |
| 옥수수 | 1.5 | 1.7 | 1.2 |
| 콩 | 12.2 | 9.0 | 2.7 |
| 감자 | 96.2 | 83.4 | 69.5 |
| 고구마 | 95.7 | 49.5 | 40.5 |
| 쇠고기 | 43.9 | 47.3 | 24.3 |
| 돼지고기 | 102.8 | 97.3 | 93.1 |
| 닭고기 | 100.0 | 96.7 | 98.7 |
| 감귤 | 100.7 | 98.0 | 80.0 |
| 고추 | 100.0 | 97.4 | 96.0 |
| 마늘 | 103.7 | 98.3 | 97.9 |
| 양파 | 102.9 | 98.2 | 97.9 |
| 참깨 | 47.7 | 34.7 | 11.6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4)

(표 6) 수입자유화에 따른 생산자잉여 감소분 예측

단위: 억원(90년불변가격)

| 구 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계 |
|------|-------|-------|--------|--------|--------|--------|--------|--------|
| 쌀 | 532 | 660 | 785 | 909 | 1,029 | 1,019 | 1,260 | 6,194 |
| 보리 | 582 | 603 | 632 | 663 | 689 | 711 | 730 | 4,610 |
| 맥주맥 | 315 | 363 | 420 | 483 | 546 | 616 | 690 | 3,433 |
| 옥수수 | 125 | 145 | 168 | 192 | 217 | 241 | 266 | 1,354 |
| 콩 | 171 | 166 | 157 | 146 | 131 | 113 | 92 | 976 |
| 감자 | 347 | 411 | 476 | 546 | 614 | 687 | 762 | 3,843 |
| 고구마 | 455 | 430 | 403 | 374 | 348 | 321 | 295 | 2,626 |
| 쇠고기 | 1,732 | 2,484 | 2,500 | 2,926 | 3,618 | 3,565 | 4,256 | 21,081 |
| 돼지고기 | 1,092 | 1,384 | 1,671 | 3,611 | 3,537 | 3,435 | 3,306 | 18,036 |
| 닭고기 | 226 | 309 | 393 | 0 | 0 | 66 | 138 | 1,132 |
| 감귤 | 746 | 570 | 1,798 | 666 | 1,746 | 570 | 1,853 | 7,949 |
| 고추 | 199 | 263 | 256 | 299 | 294 | 350 | 356 | 2,017 |
| 마늘 | 609 | 159 | 592 | 300 | 601 | 424 | 631 | 3,316 |
| 양파 | 47 | 29 | 42 | 41 | 46 | 49 | 53 | 307 |
| 참깨 | 162 | 157 | 149 | 138 | 125 | 109 | 89 | 928 |
| 계 | 7,340 | 8,133 | 10,442 | 11,293 | 13,541 | 12,276 | 14,777 | 77,802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4)

(2) 간접적인 피해

○ 직접적인 농업피해에 따른 농업생산의 위축은 자연히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자재수요의 정체를 유발시킬 것임. 여기에 공산품으로서 농업기계(농업장비)는 향후 5년내 무관세(현행 약 8%의 관세율)에 의한 시장개방이 예상된다. 화학제품의 경우 관세율을 6~6.5%로 인하하여 개방토록 되어 있음.

- 특히 농기계의 경우 생산자재에 대한 직접보조 감축약속을 연차별로 이행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전환하여 양허되지 않는 한, 현행의 보조금 지급이 폐지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시장규모 확대는 기대키 어려움. 또한 외국산 농기계의 국내침투는, 아직까지 일정한 비관세장벽이 있다고는 하지만, 쉽게 예견되며 결국 국내 농기계 산업의 성장은 상당한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음.

○ 농업생산 및 기반의 파괴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감축을 통해 직접 손실의 3배가 넘는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파괴문제는 적지 않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임. 또한 농촌 농민의 대량 유출, 농업포기로 인한 새로운 국면의 도시 사회문제가 대두될 것임. 이외에도 국민들의 정서피폐, 농민의 의욕상실, 식량확보 위협 등 숫자화하기 힘든 부분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됨.

4. UR 이후 농정의 방향

(1) 국내외 여건변화

○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UR타결로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는 불가피함. 장기적으로 볼 때,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 접근원칙에 따라 전면적 시장개방은 기정사실임. 또한 국내 농업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의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됨.

○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경제의 불력화, 해당국간의 쌍무무역 마찰 등이 가속되고 있음. EC, NAFTA, APEC 등의 조직체내에서의 지역경제 통합 및 교류증대, 중국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증대 문제, OECD 가입에 따른 서비스, 기술, 금융분야의 개방 지속화 등은 우리 모두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임.

○ 국내적으로 볼 때, 농업인구의 유출(농업 포기)이 급속해지고, 노동력의

열악화 가속, 가족 노동투하의 집약화, 영농후계자 부족 등의 인적자원 변화가 예상된다. 농지의 경우 유희농지증가, 비농업적 전용증대에 따른 농경지의 축소가 예견되며 농지이용에 있어서도 고소득, 성장작물(수요선택작물)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농민의 편의 영농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이며 식품의 안전성 제고가 강하게 요구될 것으로 보임.

(2) 향후 농정의 방향

○ UR협상타결내용을 이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혁신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실현해 나가야 함. 대외적으로는 국제화, 개방화의 여파를 최대한 줄이는 효율적인 개방이행방법을 수립하고, 대내적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구조조정정책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임. 이 과정에서 농가소득이 감소되지 않는 정책을 강구해야 함. 아울러 농산물이 안고 있는 식량안보, 환경보존 등의 비교역적 기능(NTC)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야 될 것임. 이와 같은 당면과제를 이행하는데 정책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함.

○ 농업구조개선에 관련한 국내의 여건을 보면, 농지가격의 경우 미국의 55배, 프랑스의 24배 등으로 높음. 생산기반시설도 질적인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열위에 있으며 호당 경영규모도 영세함(미국 183ha, 프랑스 28ha). 농업자재 산업도 그 규모나 기술면에서 열위를 면치 못하고 있음. 이러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한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대대적인 생산기반에 대한 정비, 그리고 경영규모확대를 위한 농지제도개선을 해야함. 농산물 품목별로 적절한 규모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키 위한 여러가지 농업경영체를 육성해야 함(표 7). 아울러 농자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생산품목별 특성 구분
 - ┌ 상대적 농지조방적 작목 : 쌀, 일반채소 등
 - └ 상대적 자본·기술적 집약적 작목: 시설원예작물 등
- 농가유형별 구분
 - ┌ 전업농가
 - └ 영농체 : 영농법인 및 위탁영농회사 등
 - 이·탈 농가 및 과도기 농가

- 농지제도의 수정
 - └ 농지소유 규모확대
 - └ 농지구입·소유자 자격완화
 - └ 농지임대차 활성화
 - └ 농지이용 및 보전대책 정비등
- 수입 및 유통체계정비
 - └ 효율적 수입관리 : 수입창구, 검역·관세제도 등
 - └ 유통체계정비 : 유통비용절감책, 차별화된 품질의 가격화 등

(표 7) 작목별 증점 정책방향

| 작 목 | 증점 정책방향 |
|-------|--|
| 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구조의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경영체 육성, 생산기반의 재정비, 경영지유동화 촉진, 환경보전 기능보상등 ○ 수매 및 유통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매축소에 따른 소득감소분 직접보상, 생산~유통의 체계화, 가격 자율화, 미질개선에 따른 차별화등 |
| 축산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화 및 기업농 육성, 허용보조지원확대(환경보전 기능으로서 분뇨처리 시설지원등), 유휴 및 한계농지의 사료재배 이용등 ○ 축산물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 육질개량(기술지원), 등급화 및 차별화 확대등 |
| 과실·채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구조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의 지역화 및 집단화 촉진, 전업 및 협업농 육성, 기계화 연구지원등 ○ 유통조직의 개선 및 품질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관련시설지원, 생산자 단체에 의한 유통지원, 품종개발 지원, 제품별 차별화 정착등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4)

○ 앞의 작목별 정책과 함께 사회정책적인 지원책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임. 예컨대 영농은퇴 장려연금제도의 정착을 통한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이라든지,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여 농민의 복지증진을 꾀하고, 현재까지도 미비한 작물보험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농민의 소득을 지지해야 할 것임. 도상계획으로만 그치고있는 농어촌종합개발계획(군단위)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어 종합적인 농어촌개발이 지속되어야 할것임.

○ 한편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농업보조금의 규모가 적지 않음. 그러나 UR타결로 인해 이부분에 대한 적절한 재조정 및 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임. 현행 국내의 각종 사안별 보조지원정책과 그의 조정방향을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음.

(표 8)

UR이후 국내농업지원정책의 조정방향

| 축소 또는 조정대상 | 지원강화 또는 신규도입 대상 |
|---|--|
| <u>가격지지 및 안정</u> - 이증가격지지(쌀)→주곡의 공공비축(쌀) - 양념류 가격지지→양념류의 가격안정화 사업 | <u>지원강화대상</u> - 연구·교육 훈련사업 - 병충해 방제지원 -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촉진사업 - 수리사업등 기반정비사업 |
| <u>기반정비</u> - 경지정리사업→농지범용화사업 - 농지확대사업→지역개발 및 대단위 농업 개발사업 | <u>신규도입대상</u> - 상수원 보호구역 농업의 환경보전 지원 - 낙후지역(산간, 도서)농어촌개발 - 이농/은토농가 지원 - 생산통제조정 지원(쌀, 콩, 옥수수) |
| <u>농기계 및 시설농업지원</u> - 농기계지원→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사업 - 시설농업지원→(개도국우대) | |
| <u>투입재 보조사업</u> - 농약비료지원→병충해방제(공동) 및 지 력유지사업 - 영농·양축자금→영세농어의 생활안정 자금 - 후계자 지원자금→교육훈련 및 구조조정 투자보조 |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4)

5. UR이후 농업기계산업의 대응방안

(1) 향후 농업기계화의 방향

○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기계화의 특징은 '60~70년대 초반까지는 자연재해방지 중심으로, '70년대 이후에는 수도작 위주의 노동대체적 기계화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음. 1990년대 이후 수도작의 주요 농작업은 80%이상 기계화가 되었으며 한계지, 유휴지를 제외하면 이 부분은 거의 기계화가 완료되는 단계임. 단지 옥묘와 건조작업의 기계화는 아직은 낮은 수준임. 채소, 과수, 특작 등 발작물의 경우에는 수도작용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운·정지, 방제, 수확(보리, 청예사료)을 제외하면 이제 시작단계임.

○ 향후 농업의 발전방향에 비춰볼 때, 농업기계화정책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주고, 고품질 농산물생산의 기술농업이 정착되도록 기본틀을 구성해야 함. 따라서 작목별 일관된 기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질 좋은 농기계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노동력 절감은 물론 농작업의 안정성 확보, 농산물의 고급화 및 상품성 제고, 생육과 출하시간 조절이 가능토록 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농업기계화의 실현을 위해 대규모화 된 경지기반의 재정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함. 특히 향후 농업기계는 대형·정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의 이용에 적절한 생산의 집단화가 요구됨. 다시 말하면 기계도입이 용이한 생산체계를 확립해야 함(집단화, 공동화). 또다른 측면에서 작물의 재배방식(품종포함)을 기계화에 적합토록 개선하여야 하며, 농민의 기계조작 및 수리능력제고도 반듯이 필요함. 아울러 국내 농기계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도 실현되어 품질 좋고 저렴한 농기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2) 농기계산업을 둘러싼 여건

가. 국내외 시장규모

○ 세계농기계 시장규모는 '90년대 560억달러 정도이며 그 증가추세는 그다지 크지 않음. 이는 주요 농업선진국인 북미, 유럽과 일본의 농기계 내수시장 성장폭이 '80년대 중반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개발도상국가의 농기계 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어 세계 농기계 시장의 성장규모를 이끌고 있음.

○ 국내 농기계 시장은 정부의 정책지원을 통해 확대되어옴. 특히 보조금지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1989.1.1.), 용자규모확대 등을 통해 농기계가 공급되어왔기 때문에 적정수요보다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임. 농기계 및 소요부품의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어려움. 상공자원부, 경제기획원, 농협 등의 자료에 의해 추정해 보건데, 1993년 국내농기계시장규모는 농기계부분이 약 7,300억원, 비용자농기계(구) 및 부품등이 약 1,500-2,000억원, 총 8,800-9,300억원 정도로 보임. 이는 1992년에 비해 약 1,000억원 정도가 증가한 것임. 농기계 반값보조 이전인 1991~'92년 사이 농기계시장은 0.3%의 증가에 그쳤으나 농기계반값보조, 보조금지원확대등으로 인해 '92-'93년에는 11%정도의

시장확대가 있었음. 그런데 이러한 국내 농기계 시장은 국산 산 농기계에 의한 것 보다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의 증대에 의해 확대되고 있음. 1991~'92년 기간 농기계 수입량은 195,348천달러에서 '92년에는 18.7%가 증가한 230,190천달러를 나타내고 있음. 아울러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기종별 시장에서도 경운기나 바인더 등의 소형 농기계의 시장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물론 농기계 반값공급이 이러한 질서를 왜곡시키고는 있으나 보조규제시 원상회복될 것임. 트랙터, 이앙기, 콤팩트 등의 수도작 농기계는 대형중심으로 수요가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산 농기계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음. 전작용 농기계는 관리기의 부착작업기를 광범위하게 개발하면서 그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고성능방제기나 농산물 건조기 역시 수요확대가 예상되며, 특히 원예작물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영농에 필요한 하나의 시스템 보급(시설영농 기자재)이 활발해 질것임.

나. 농업기계 생산업체 현황

○ 우리나라 농업용 기계 제조업체는 총 361개소, 종사자는 12,327명임. 비교적 중·대형 농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5개사를 제외하면 방제기, 작업기 등을 생산하는 중·소규모업체들이 주류를 이룸. 이들업체의 연간 총농기계 매출액(부품포함)은 8,800억 - 9,300억원정도로 추산됨.

○ 1992년말 현재 정부 농업기계 용자지원 공급업체는 총 44개이며 이중 자본금이 10억을 넘는 회사는 11개 업체, 종업원 100인 이상업체는 12개 업체에 불과함. 주요기종의 생산업체수(수입공급포함)를 보면 평균적으로 1기종 5개업체 정도이며, 많게는 난방기의 경우 21개소로서 생산난립 현상을 보임(표 9).

(표 9) 주요기종의 생산공급 업체수

| 생 산 업 체 수 | 생 산 공 급 기 종 |
|-----------|-----------------|
| 4 | 바인더, 콤팩트, SS방제기 |
| 5 | 경운기, 이앙기 |
| 6 | 트랙터 |
| 8 |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
| 21 | 농업용 난방기 |

자료: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 1992.

○ 또한 동일기종 일지라도 빈번한 모델 변경(판축의 일환으로 판단)으로 인해 제품간의 차별화가 심함. 물론 차별화의 궁극 목표는 생산기업의 수익증대이기에 규제한다는 것은 어렵겠으나, 너무나 다양한 형식과 모델의 변경은 자체 양산체제의 정립과 이로 인한 비용절감, 나아가 기술축적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음. 농기계산업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보임.

(표 10) 주요보급기종 농업기계의 생산 현황

| 기 종 | 모 델 수 | 연간 총 생산대수 |
|-------|-------|-----------|
| 동력경운기 | 22 | 50,000 |
| 농용트랙터 | 13 | 14,000 |
| 동력이앙기 | 10 | 35,000 |
| 바 인 더 | 3 | 11,000 |
| 콤 바 인 | 4 | 15,000 |
| 곡물건조기 | 6 | 3,000 |

자료: 강정일의(1991).

다. 농기계 가격 및 유통

○ 국내 농기계 판매가격은 1988년 10월이후 업체의 자율아래 있음. 그러나 중대형 농기계의 경우 유통단계에 따라 판매가격을 결정치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현재 농기계 유통마진은 5대 대기업의 경우 기본 7%에서 각 회사에 따른 장려금율이 가산되어 10-13%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나머지 중소기업은 공장판매가에 중간 판매상이 자유롭게 마진을 더하여 판매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소형기종의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유통마진폭은 그리 크지 않음(어느 경우는 7%이하도 많음).

○ 우리나라 농기계의 대외가격 경쟁력은, 일본에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는,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됨. 경운기, 바인더, 관리기 등은 일본가격의 50% 수준이상이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은 60~70%수준임(표 11). 그러나 대형기종의 경우 국내 생산이 없기에 그의 비교는 어려움. 여기에서 문제는 대형기종의 수입이 최근 활발하여지고 있으며 이것을 국내 주력업체들이 선도하고 있다는 점임.

(표 11)

농기계가격의 한, 일간 비교

| 기종 | 한국 | 일본 | 일본(100)에 대비한 한국산가격지수 |
|-----|-------------|--------------|----------------------|
| | 모델명 | 모델명 | |
| 경운기 | ND80/DT85 | KRA58-R5G | 29.6 |
| | ND130/OT95A | KRA95-R5G | 29.5 |
| 트랙터 | L2203-4WD | GL23 | 44.8 |
| | L3503-4WD | GL35 | 49.3 |
| | D4351-4WD | GL43 | 58.7 |
| 이앙기 | D8470 | SI-40DL | 44.4 |
| | SI-600R | SI-600RHD2 | 82.1 |
| 바인더 | HE50A | RA50 | 48.1 |
| 콤바인 | RI-191 | RI-191AK-S50 | 57.1 |
| | RI-241A | RI-241K-S50C | 66.7 |
| | RI-43 | RI-451K-D50C | 60.0 |
| 관리기 | FRT70E | TI-D5 | 44.8 |

자료: 정만태(1993).

○ 국내 농기계 유통체널은 생산자에서 중간 대리점 또는 단협, 시판상인을 통해 직접 농민에 전달되는 단순한 형태임. 농기계 생산자와 중간유통인(대리점) 사이의 조직은 두가지 성격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위탁판매이며 다른 하나는 물건의 이동에 따라 유통주체와 생산자간에 매매가 발생하는 형태임. 그런데 위탁판매의 경우 농기계 제조회사에서 직접 판매관리, 자금회수 등의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간(사실은 대리점을 내세워 독려)의 치열한 판촉전이 이뤄지고 있음. 따라서 그렇지 않은 대리점의 경우에도 타대리점의 판촉에 대응키 위해 자체 대리점의 자금으로 판촉전선에 나서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리점은 자금압박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음.

라. 기술수준

○ 우리나라 농기계 생산기술은 대부분 일본, 미국, 이태리와의 기술제휴에 의해 이전받은 것들임. 이로 인해 기술개발내용도 대개가 선진농업기계 생산기술을 국내생산이 가능토록 하는 응용연구에 치중하고 있어 기초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이러한 원인은 첫째 생산기업자체가 대규모 기업이 아닐 뿐 아니라 다양한 기종을 생산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대해 집중연구투자가 곤란하며, 두번째 여기에 국내시장자체의 규모가 크지도 않으며 또한 성장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 농기계가 가격면에서는 어느 정도 국제적 유리성을 갖고 있으나 품질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사용 농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국내 농기계의 수명은 외국 수입제품에 비해 트랙터의 경우 3~4년, 이앙기, 콤바인의 경우 2~3년이 짧음. 이러한 원인이 되는 농업기계 생산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 기술의 기술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상당히 낮은 수준임이 분명함 (표 13). 이것은 자체 기술개발 투자의 저위에도 원인이 있으나 관련 철강, 소재산업의 전체적인 저발전에도 원인이 있음.

마. 경영 및 시설가동율

○ 농기계 생산업체의 경영악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 이러한 원인은 1기종 다기업 생산체제 아래 국내시장 확대(수출포함)는 미진하고, 다기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은 과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기 위해 생산업체간 치열한 판촉 경영이 유발된 것에 있음. 나아가 농기계 미수 채권(선공급기대분의 자금포함)과 차입금의 증가는 금융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여 결국 농기계생산업체들은 부실경영에 빠지게 되었음. 이러한 경영악순환의 논리는 1980년대 이래 꾸준히 지적되어온 것이며 대규모 농기계 회사의 대리점에도 적용되어 이들 또한 불확실한 경영에 직면해 있음.

○ 농기계 생산업체의 생산시설 가동율은 생산라인의 범용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절적 수요에 따라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됨. 물론 시장수요가 생산시설 규모를 능가할 수 있을 때는 문제시 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수출조차 미진한 상황아래 가동율의 저하는 어찌면 당연한 귀결임. 이에따라 농기계제조회사들은 이의 탈피를 위해 과당판촉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이는 결국 농기계생산회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함.

(표 14) 농업기계업체의 가동율 수준

| 구 분 | 단위 % | | |
|-----------|------|------|------|
| | 1990 | 1991 | 1992 |
| 경 운 기 | 31.0 | 31.9 | 27.3 |
| 트 랙 타 | 46.0 | 29.9 | 28.7 |
| 이 앙 기 | 61.0 | 53.2 | 38.9 |
| 바 인 더 | 40.0 | 39.8 | 26.2 |
| 콤 바 인 | 54.0 | 52.9 | 43.9 |
| 곡 물 건 조 기 | 45.0 | 45.5 | 30.2 |
| 평 균 | 42.0 | 38.5 | 31.3 |

자료: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

바. 수출입 및 기타

○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농기계는 종합조립의 대형기계보다는 소형농기계로서 경운기, 수확기 등과 부속작업기 및 부품 등이 주류임. 이들은 대부분 동남아 등의 개발도상국가와 미국, 일본 등에 수출되고 있음. 가장 수출이 많았던 1992년도의 총수출액은 22,973천 달러로써 200억원 규모에도 못미침. 수출과는 달리 국내 수입농기계는 대개 대형 정밀 농기계 및 소요부품이 많아지고 있음. 주요 수입국으로는 일본(60%수준), EC(15%수준), 미국과 스위스(16%수준)등임. 1992년도 농기계 및 부품의 총수입액은 230,190천달러로써 2,000억원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 농기계무역수지의 적자폭이 매우 큼.

(표 15) 농기계 수출입 규모

단위: 1,000\$

| 구 분 | 수 출(A) | 수 입(B) | 무역수지(A-B) |
|-----------|--------|---------|-----------|
| 1991 | 18,637 | 195,348 | - 176,711 |
| 1992 | 22,973 | 230,190 | - 207,219 |
| 1993.1-10 | 13,667 | 190,758 | - 177,091 |

자료: 상공자원부, 『수출입통계』, 해당년도.

○ 이밖에 농기계 생산의 자동화, 생산기업체간의 계열화체계가 미흡함.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저위에 따른 투자확대의 어려움, 발주물량의 소량화 등의 원인으로 나타난 현상임. 나아가 보다 좋은 기술인력을 확보키 어렵고, 기술투자재원 역시 부족하여 농기계 생산기술의 진전은 답보상태를 보임. 물론 절대적 진전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선진국과 비교시 상대적 정체를 의미함.

(3) UR 이후 농기계 산업의 당면문제

○ UR협상타결 내용이 이행되면서 농기계 산업이 붕착하게 될 상황을 예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님.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추진으로 농업기계화가 촉진되고 이에따라 농기계시장규모가 다소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수도작용의 농기계수요는 정체될 것으로 보임. 여기에 UR이후 현재의 정부보조금이 삭제되고, 무관세에 의한 시장개방이 시작되면 우리나라 농기계시장은 외국산 농기계에 크게 잠식당할 소지가 많음. 따라서 국내생산업체는 심각한 경영악화의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대만 전자시장개방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A/S와 품질을 앞세운 선진국의 시장침투는 국내 산업의 생산기반 파괴를 가져올 수 있음.

- 국내 농기계산업의 자본 및 기술의 축적은 낮은 수준임. 현재로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선진국 농기계에 대항해 나간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열악함.

- 비관세장벽으로써 A/S망이나 시험규격, 수입선 다변화정책(1년차 30%정도 국산화요구) 등이 제시될 수 있으나, 현재 외국산 농기계의 수입판매가 국내 제조업체들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부분은 그만큼 큰 의미가 없음.

- 농기계 가격의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품질면에서 그정도 이상의 저위를 보임. 농민에 의한 외국산 농기계의 선별적 수요가 그것을 나타냄.

- 국내 농기계 제조업체들의 경쟁은 외국 농기계의 도입과 더불어 더욱 치열할 것임. 이 과정에서 유통주체로서의 대리점의 존립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 국내 농기계시장규모는 소규모 농기계가 대규모화되는 이외 그리고 축산시설 농기계 이외에는 커다란 확대를 기대키는 어려움. 특히 보조금 삭제는 이를 가중시킬 것임.

○ 물론 단순 대형농기계, 예컨대 건조기류나 온풍기류 등의 국내 수입은 그 농기계의 물리적 성격(부피가 큼)으로 인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와는 달리 국내수요가 미미한 농기계, 예컨대 하수스용 연무방제기와 같은 농기계들은 오히려 국내생산보다 수입이 유리할지도 모름.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소량 수요의 농기계라할지라도 시설원예의 경우 고가정밀품으로 시스템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함.

○ 한편, 현재와 같은 상태로 농기계시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농기계 생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는 요원할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 및 유통구조 아래에서 자생적인 기술과 자본의 축적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임. 그렇다고 기술과 가격경쟁력이 높아서 급속한 해외시장의 개척이 가능하나 하면 그렇지도 않음. 결국 UR협상이 완전히 실행될 경우 국내 농기계 산업은 단순상인으로서의 존립할 수 있으나 발전가능한, 세계시장에 진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산업으로서의 존립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4) UR이후 농기계 산업의 대응방안

○ 농기계 산업이 살아남는 방법은, 목표와 주어진 시간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매우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음. 경쟁 상대국의 농기계보다 보다 싼 값으로, 보다 우수한 농기계를 만들어 내는 것임. 즉 가격과 품질 경쟁력에서 이겨야 됨. 그렇다고 모든 농기계에 있어서 그래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봄. 적어도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주력기종에만 해당되며 소규모 수요 농기계는 현재로서는 논외로 하는게 좋을 듯함.

가. 산업구조개편

○ 농기계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중적인 투자재원이 요구됨. 아울러 이러한 투자재원이 목표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임. 이러한 의미에서 1985년 이래 학계나 업계에서까지 끊임없이 논의되어온 기종별 업종 전문화라는 산업구조개편을 반드시 이루어야 함. 대외무역의 경쟁에서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이기기 위해서는 기종별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함(전문가의 80% 이상 찬성). 물론 기종간의 공동부분의 개발은 상호협력체제를 유지하여 효율화를 도모해야 될 것임.

○ 상정해 볼 수 있는 전문화 생산체계는, 먼저 3가지 스타일의 농기계로 구분한 다음, 여기에 따라 생산업체를 전문화시키는 구상임.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 기종별로 전문생산체제를 유지시켜야 할 것임. 그래야만 과당경쟁이 예방되어 그나마 자본축적, 기술개발이 용이하게 됨. 그러나 이러한 구조혁신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됨. 따라서 기업간 자율조정만 기대한다는 점이 현실적인 문제임.

- 기술, 가격경쟁력이 지속가능한 기종: 경운기, 관리기, 소형기구등
- 기술, 가격경쟁력이 낮은 기종: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등
- 수입자체가 어려운 기종: 건조기, 운풍기등

나. 생산비 인하방안 강구

○ 현재의 시장구조 아래에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의 강구는 단기적, 현

실적 치유책임. 이러한 방안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농기계산업이 발전되리라 기대하기는 힘들. 도약의 기반정비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되는, 그러나 산업구조개편이 이루어진 후에도 요구되는 부분됨임.

- 첫째 완제품 및 부품의 규격화, 표준화를 확대해야 됨. 다양화되어 가는 수요에 대처키 위해서는 반대일 지도 모르지만, 국내수요량도 한정된 아래에서 동일기종내 동일용도의 부품이 약간의 차이로 인해 호완성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 외주업체의 규모생산이나 해당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노력이 유발될 수 없음. 자동차의 경우 외주업체에 의한 기술개발이 적지않음은 이부분의 중요성을 나타냄.

- 둘째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고정값가상각비의 부담이 되는 과도한 생산시설을 적절히 축소해야 될 것임. 적지 않게 논의되어온 생산라인의 범용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해야함. 여기에 과도한 생산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신중히 생각해야 됨. 앞에서 주장한 업종별 전문화로의 농기계산업구조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이부분은 대외수출지향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을 것임. 그렇지 않을 경우 과감히 생산시설을 재정비해야 할 것임.

다. 인력 및 기술개발

- 대내외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급인력을 농기계산업에 끌어들이기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된다는 명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 지금까지 수없이 부르짖어온 인력 및 기술개발이 잘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그런데 그원인은 쉽게 찾을 수 있음. 고급인력에 대한 농기계산업의 흡인력이 없다는 것,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유혹도 능력도 없었다는 것임.

- 지금까지 농기계 제조업체들은 외국제품의 복제생산후 판매에만 주력하여 왔음. 이과정에서 과도한 시설확장 및 판매경쟁으로 자본 및 기술축적의 기초가 형성되지 못하게 됨. 아울러 농기계 생산업체 상호간에 수익성이 악화되는 과정을 겪게됨. 결국 그동안 고급인력을 유치할 만한 필요성도 없었으며,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력도 미약했음.

- 그러나 산업의 새로운 구조혁신아래 과도한 판매경쟁이 지양되고 전문화된 생산체계가 정립되면 기술개발 투자의 유인과 여력이 과거보다는 배가될 것으로 보임. 한편으로는 최근 국내기업간에도 나타나고 있는, 개별기업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전략적 제휴(생산에서 판매까지)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의 하고자하는 의지와 도덕적 윤리관임. 수익을 재투자하지 않을 경우 산업구조개선도 기술개발도 공념불에 지나지 않음.

라. 국제시장으로의 확대진출

○ 어떤형태(OEM, OBM등)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느냐보다는 어느 곳에 어느제품이 현재 필요한가, 제품들간의 품질과 가격은 어떤 상황인가등에 대한 정보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수집에 국내생산업체별로 과잉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동 콘소시엄형태의 정보수집체 구성이 바람직함. 현재의 대외수출은 소규모 농기계 및 기구로써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보문제가 그다지 중요치 않을지도 모르지만 국극적으로 농기계산업이 발전키 위해서는 대외지향적 성장목표를 세워야 되고, 여기에는 정보가 가장 중요한 출발조건이 됨.

○ 현재의 해외진출 상위품목은 소형농기계와 농기구, 부속작업기 및 부품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남아, 아프리카등지에 합작투자를 통해 생산법인을 설립하여 그지역 주변시장의 정복에 나서는 것이 생산비용과 외교통상마찰 등의 면에서 유리할 것임. 장기적으로 볼때 국내고유의 상표를 가지고 진출하는게 바람직하겠으나 과도기적인 상황 아래에서는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마. 과당 판촉경쟁 지양

○ 1980년대 이래 농기계제조업체간의 판매경쟁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특히 대부분의 농기계는 정부의 용자 및 보조에 의해 판매되고 있고, 유통상은 대리점과 농협으로 되어 있어 더욱 그러함. 여기에 동일기종을 여러회사에서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과다보유(연중생산이 어렵다는 요인도 있음)는 더욱 그 강도를 높여주고 있음.

○ 1980년대 후반 농기계판매 대리점간에 선공급(용자수속이 완료되기전에 판촉차원에서 농가에 미리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져다주는 행위)을 하지 않겠다는 공증을 한 것은 흔히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일 것임. 또한 한개

대리점에서 지출되는 순수판촉물 제작비가 연간 3,000만원을 웃돌고 있다는 사실 역시 쉽게 수용되지 않음. 이와 같은 농기계대리점의 판촉을 독려하는 것은 물론 농기계제조회사임.

○ 과도한 판촉경쟁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1차적으로 농기계대리점에 대한 판매 할당량, 조기 자금회수 등의 사업강요가 이루어져 농기계대리점은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압박을 받게 됨. 위탁판매라 하더라도 농기계회사가 원하는 자금을 원하는 시간에 농기계대리점에서 회수해주면 좋으나 대개는 이것이 어려움. 따라서 과도한 실질적인 재고에 농기계회사는 당면하게 되고 결국 전체적인 자금압박, 외부자금의 의존도 제고가 유발됨. 결국 판매비용 과다, 금융비용 과다, 자금압박 등이 동시에 겹쳐 경영상태는 열악해질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생산업체간의 과도한 판촉경쟁은 더이상 용납되지 말아야 함. 이러한 행위는 농기계시장개방시 동반파멸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 심각할 정도로 과당경쟁이 나타나고 있음.

바. 체계적인 정책지원

○ 먼저 업종별 전문화정책을 농기계산업의 구조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 추진해야함. 이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되는 농기계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업종전환 지원책을 강구해야함. 1977년 상공부에서 농업기계제조업육성기본계획(상공부공고 제77-53호)을 세워 농기계제조회사를 종합형 및 중소전문화형으로 구분하여 육성키로 하였으나 그성과는 미미하였음. 보다 강력한 정책적 의지아래 농기계산업의 일대 구조혁신이 필요함.

○ 기술과 인력개발을 위해서 국가연구기관과 기업간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시켜야함.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기계의 품질수준조차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선진국 기술에만 메달리는 성급함은 자제되어야 함. 아울러 국내 기술개발과 내용은 국가제도적으로 철저히 보호해 주는 보완책도 필요함. 인력개발은 농기계산업의 발전뿐만아니라 A/S의 건실화를 통해 농업발전에도 필요함. 병역특혜등의 정책적인 보완책들의 확대가 요구됨.

○ 생산 및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은 산업구조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질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임. 당분간 산업구조개선이 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 자금축적능력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 따라서 어느정도의 자금과 기술

력이 보유될 때까지 정부에서는 기술개발자금과 생산전도자금등의 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위 외에도 여러가지 세세한 정부정책을 고려해 볼 수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위의 세가지만이라도 시행된다면 희망이 있는 것임. 다른 부분은 조금 희생하더라도 위의 것은 꼭 실행되도록 노력해야 함.

6. 결론

◦ 유사 이래 우리농업에 가장 큰 시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UR협상이 타결되어 농업의 장래는 매우 불투명함. 농업의 공공재적 성격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어떻게 유지, 발전시키느냐는 최대 중심 사안임. 일반적으로 농업의 생산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농자재산업도 생산위축이 예상됨. 농자재산업, 특히 농기계산업은 공산품으로써의 규제도 받게 되며, 농업생산 자체에 대한 보조금 규정에도 해당되어 적지 않은 국내산업피해가 우려됨. 그러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개선사업에 있어서 농업기계화가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계산업에는 긍정적 파급효과도 있을 수 있음.

◦ 현재 우리 농기계산업은 외국 농기계의 수입제한이 이루어진다해도 1기종 다 기업 생산과 과다시설 보유 등으로 인해 기술개발이나 자본축적의 가능성이 매우 낮음. 국제적 시장규모의 획기적 확대나 우리 기업들의 참여 확대 또한 쉽지 않을 것임. 여기에 무관세에 의한 농기계시장개방이 이루어지고, 농기계구입 보조금삭감이 이루어질 때 국내수요 정체, 대형정밀 외국산 농기계의 침투 등으로 우리 농기계산업은 자칫 기반자체까지 흔들릴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즈음에 우리 농기계산업이 가야할 기본방향을 세워야 함.

◦ UR이후 우리 농기계산업이 어떻게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면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 임.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산업의 구조를 재편하고, 나아가 현실적인 문제해결책과 아울러 정책이 구상되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방안으로써, 첫째, 기종별 전문화 생산의 산업구조 개편, 둘째, 내부적 생산비 인하방안으로 제품의 표준화, 계열화, 생산공정의 개선, 과보유 고정시설 적정처리, 셋째, 인력 및 기술개발, 넷째, 1차적으로 집단적인 해외정보 수집 및 해외진출책 강구 다섯째 과당

판촉지양, 여섯째, 체계적인 정책지원등을 제시함.

○ 문제는 이러한 대응방안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논의되어 농기계 산업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업체와 정부가 같이 고심해야 함. 목표와 시간이 주어진 상태이기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하다고 봄. 우리 농업과 농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도록 해야 하겠음.

참 고 문 헌

- 강정일의, 『농업기계유통 및 사후봉사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강정일의, 『농업자재시장의 구조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8.
강정일의, 『농업기계사업의 장기정책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8.
강정일의, 『2000년대 농업기계화의 전망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정만태, 『90년대 농업기계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산업연구원, 1993.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연감』, 각년도.
한국농업기계학회, 『전작·시설원예의 기계화현황 및 추진방향』, 199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농산물협상자료1, 2, 3』, 199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 1994.
(주)신농림사, 『농업기계연감(일본)』, 1990-92.